▶▶ 매일 INDEX

4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좌절 않고 공부할 수 있길"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음 5월 22일) 제4007호

대표전화 (063)288-9700

10면
"시민 체감 실질적 변화 완성"

호남 반도체 전북 소외… 해법 마련 절실

"산업정책 재설계해야"

지식인들 "너무 안일하게 대응" … 도내 정치권 책임론 제기

"산업 경쟁력 현실 보여주는 경고… 타산지석의 기회 삼아야"

지난 6월말 전남·광주에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초대형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전북이 대상에서 제외되자 도민들의 박탈감과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호남이라는 미명 아래 전남·광주에 국한되고 전북만 사실상 소외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무능과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 교육,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구축하는 미래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단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투자 규모만 800조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대단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북 도민들은 "호남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왜 전북은 제외됐느냐"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무엇보다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전북의 지식층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정책을 예고했는데도 전북은 제대로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통합시장 측은 선제적으로 삼성전자 사장 출신 인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영입해 산업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전략, 정부 설득 논리 등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보 역시 양 지역의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광주·전남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친환경 전력 공급 여건을 선제적으로 갖춰 왔지만, 전북은 이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부 역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북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식층에서는 "전북 정치권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부를 전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도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서야 정치권이 광주·전남 투자 계획을 뒤늦게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월 말경 타운홀 미팅을 통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발표가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느냐는 해석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북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한 정부는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업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지역은 섭섭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순한 위로성 발언만으로는 뒤돌아선 전북 민심을 달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일을 단순히 정치적 논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전북 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AI와 반도체 후공정 산업 유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연구개발기관 확충 등 전북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미래 산업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전북이 처한 산업 경쟁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 대형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준비와 정부 설득, 기업과의 협력, 인재 양성, 기반 시설 구축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800조원 반도체 투자에서 제외된 전북은 이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2차 공공기관 배분시 어떻게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알짜배기를 유치할 것인지 등 남은 국가전략사업 유치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치밀한 전략 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바꿀 실질적인 해법책 마련이다.

/이만호기자

'3대 메가프로젝트 전북 소외, 균형발전 촉구'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희수(앞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이 3일 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기사 3면〉

전북도민이 설계… 도민주권정부 '첫걸음'

도민주권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민선9기 공약 등 반영

민생부터 미래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민 의견 담겨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도민과 함께 그려낸 민선9기 도정 밑그림을 토대로 도민주권정부 실현에 속도를 낸다.

이원택 도지사 후보 시절 꾸려졌던 도민주권참여위원회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북의 미래 비전과 민생 현안에 대해 총 80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민선9기 공약과 139개 도정 과제에 담아냈다.

이는 도민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주권자로서 기획·설계 단계부터 목소리를 낸 것으로, 민선9기 핵심 가치인 '도민주권'을 현실로 옮긴 첫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민이 제안한 정책은 창업·지역경제, 복지, 에너지, 교육, 체육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울렀다. 새만금을 거점으로 한 창업도시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돌봄서비스 확대, 신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청년 진로·취업 지원, 생활체육 인프라와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 등 민선9기 정책 밑그림을 짜는 데 반영됐다.

도는 이번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안들을 민선9기 공약과 도정과제에 순차적으로 담아낼 방침이다. 실행 가능한 사안은 여건과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단계별로 추진하고, 제도 개선이나 유관 기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검토를 거쳐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안별 특성에 맞는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책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다양한 소통과 참여 창구를 통해 도민이 정책의 주체로 서는 도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도민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은 정례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주권정부는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도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정부"라며 "도민과 함께 그린 전북의 미래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도민 중심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장마철 농업재해 대응 총력… 농식품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기상정보 · 예방 요령 안내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마철을 맞아 농업 분야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장마 대비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16개 시·도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장마 기간에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피해 우려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TV 자막,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농업재해 예방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 복구와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